

발제 1

‘국제화’와 한국의 민족주의

김 동 춘

서울대 강사, 사회학·본지 편집위원

1. 문제의 제기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한 냉전질서의 와해, 범지구적 자본·금융 이동과 생산의 초국가화로 인류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미·소 양 제국을 축으로 하는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몰락은 정치적으로는 국익우선주의, 민족주의, 분리주의를, 경제적으로는 무적의 시장논리와 지역경제통합의 문제를 등장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정치·경제적 과정에서 변함없이 등장하는 이슈는 민족국가, 민족의 부활 혹은 소멸의 문제이다. 즉 냉전의 와해로 말미암아 독일은 갑자기 통일되었고, 유럽통합의 심도가 깊어지면서 유럽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주권의 약화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붕괴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 내에서는 소수민족이 독립하였고, 다민족국가인 유고에서는 피비린내나는 내전이 계속되는 등 민족주의의 열풍이 새롭게 불어닥치고 있다.

국제적인 활발한 자본이동과 금융이동, 우루과이라운드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무역체계의 수립, 초국적기업의 활동, 유럽통합과 북미·아시아·남미에서의 경제통합의 시도는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경제’의 개념은 점점 의문시되고 있다. 자본·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해온



▲ 김동춘

정치적 장벽이 철폐되고 국가간 경제적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공동체와 민족단위의 삶의 기반이 약화되었다. 케네디(P. Kennedy)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국가는 위로는 초국가질서의 구축에 의해, 아래로는 지방화와 인종주의, 다양한 분리주의 운동에 의해 이중으로 위협받고 있다.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형성을 주도한 서유럽 지역에서 국가주권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화가 시작된 최근 200~300년 동안 인간의 삶의 조건을 규제해온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제도와 질서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더이상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변화된 세계질서를 바라볼 수 없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이제는 라이히(Reich)가 지적한 것처럼 “누가 우리인가”하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거나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이 논의되면서 국가, 민족의 성원 내에서 동일한 이해기반이 존재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강압적인 중앙권력과 이념에 의해 억제되었던 민족분리주의, 인종주의가 급작스럽게 부활하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강제로 연방에 편입되었던 동구 민족들의 분리·독립의 기운이 일어나는 한편, 이들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캐나다, 영국, 스페인 등 민족국가의 전통이 매우 오래된 나라에서의 분리주의가 기존의 국가를 허물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가질지는 미지수이지만, 구소련이나 동구지역에서의 분리주의적 민족주의, 티벳 등지에

서의 종교적 극단주의는 이념이 사라진 뒤에 남은 공백을 메우는 '기능적 대체물', '정신적 구세주'로 자리잡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의 강화는 홉스봄(Hobsbaum)이 말하는 것처럼 1918~1921년에 미완되었던 것이 부활되는 것이지, 결코 세계사의 사태발전의 동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민족, 국가, 민족주의 문제는 이러한 두 유형의 어느 쪽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냉전체제의 붕괴로 한편으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1945년 무렵에 이루지 못한 근대적 민족주의, 민족형성의 과제가 부활되면서 민족국가의 수립이 본격화될 국면에 놓이게 되었는가하면, 다른 한편으로 이미 남한자본주의의 발전수준과 남한자본의 능력이 '전통적인' 민족국가와 민족경제의 기반이 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국제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의 분단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서, 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근대적' 프로젝트가 민족국가의 '이중적' 약화라는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국제화'의 걸림돌로 '과도한 민족주의'가 비판받는가 하면, 냉전질서가 붕괴되었는데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 즉 '민족주의의 결여'에 대해 저항하는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한국 민족문제의 이러한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로 한국의 민족문제는 '근대적 과제'와 '근대 이후의 과제'가 공존하는 현대 세계역사의 희귀한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화',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프로젝트와 그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어떠한 기반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정부와 기업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국제화' 전략과 '민족주의'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국제화'와 민족, 민족주의

민족(nation), 국가(state), (국가·국민)민족주의(nationalism)의 개념은 모두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이들 개념은 모두 역사적 시기와 정치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재하는 것은 구체적인 '...민족', '...국가', '...민족주의'이지만 이들 역시 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근대적 현상이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시기, 언어·인종·문화적 조건, 중앙집권적인 절대권력의 존재 여부, 지식계층의 형성정도, 인접 민족·종족과의 전쟁 등 갈등관계와 결합된 역사적 산물인 것은 틀림없다. 근대적 현상으로서 민족 혹은 민족

주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 정치적 조직체를 형성하려는 운동으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겔너(Gellner)는 산업화와 민족주의를 연결시키고 있는 반면, 앤더슨(B. Anderson)은 민족주의를 정서와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사회에서의 종교의 기능적 대체물로 보고 있다. (국민)민족주의는 인종, 언어, 문화 등 초역사적인 공통의 정신적 기반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치단위를 결집하거나,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억압을 극복하려는 정치운동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와 정치는 민족주의의 두 기둥이며,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민족국가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의 정도나 억압의 심도에 따라 민족주의는 더욱더 강렬한 것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초기단계의 nationalism은 곧 국민주의의 형태를 지니고 내용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후발자본주의 국가의 nationalism은 침략적 배타적 성격을 지니며 국가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식민지 지역의 nationalism은 저항적 민중적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nation이라는 것도 인종, 언어, 문화 등의 기준에 의해 추상적으로 정의되기는 어렵다. 18, 19세기 부르주아 혁명과정에서의 nation은 국민, 즉 부르주아를 의미하였으나 국가의 기능 확대, 보통선거권, 노동조합의 허용으로 점차 노동자계급을 국민, 민족으로 일체화하였다. 그러나 근대 민족 형성, 국가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물론, 국가의 역할이 크게 확장된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정치·문화 공동체 내의 다양한 계층·계급집단이 동일한 자격으로 이 공동체에 포섭되지는 않았다. 전쟁과 같이 전성원의 일체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조차 구성원은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해 완전한 일체감을 느끼지는 않았으며, 단일한 정체감을 갖지도 않았다. 특히 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민족주의의 담화는 대부분의 경우 외세와의 관계 속에서 지위의 추락을 느낀 지식인들에 의해 전파·확산되는 것이며, 그것이 민중에게 설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침략이나 억압 등 객관적 조건이 존재할 때 실질적 기반을 얻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자본가들은 민중에 비해서 훨씬 더 국가, 민족에의 소속의식을 갖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이윤을 보장해주는 시장이 언제나 더 중요했다.

모든 민족이 민족국가로 결집된 것도 아니며, 모든 국가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다. nationalism은 국가의 기반이 되지만, 국가가 곧 자신의 정당성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이때 nationalism은 인종, 언어, 문화의 동질성보다는 국가의 목표와 질서에 대한 준수, 국가에 대한 헌신이 그 실제적인 내용을 이루게 된다. 베버(Weber)나 발리바(Balibar)가 말한 것처럼 국

가성(statehood)은 민족성(nationhood)에 앞선다. 그것은 국가가 무력을 포함한 물리력으로 구성원의 행동과 사고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근대적 정치공동체는 근대 이전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정치공동체를 모두 흡수·통일한 보편적인 공동체로 자리잡아, 구성원들을 ‘공동운명체’로, ‘기억공동체’로 묶을 뿐더러 성원에 대한 보호 기능과 복지 기능을 점차 확대해왔다.

결국 민족주의, 민족국가의 형성은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의 산물로서 그것은 구성원의 평등성에 입각한 근대국가를 형성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주의의 구체적 성격이나 그 강렬성은 경제적 정치적 억압의 강도, 엘리트층의 사회적 위신 추락의 심도, 전근대사회에서의 문화적 동일성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그것은 출발부터 한 민족의 독자적인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사회구성원에게는 언제나 자신의 처지와 연관되어서만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도 기든스(Giddens)가 말하는 것처럼 애초부터 배타적으로 존재해왔던 것은 아니다.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자본의 초국적화와 정치적 국민국가 형성의 이중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는 곧 국민국가 완성의 역사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질서는 일차적으로는 국가라는 정치적 경계 속에서 완성되었다. 근대의 세계는 이 양자간의 모순의 역사였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과 시장경제 수립으로서의 ‘국제화’와 일국단위의 주권과 정치질서의 확립, 민족주의의 등장은 모순적으로 진행되는 동시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배타적 주권은 애초부터 분리가능한 것이었으며, 국가의 경제력과 정치지리학적 위치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것이었다.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식민지 병합이 주권의 완전한 침해라면,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방위기구에서의 서유럽 국가주권의 제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무역기구에 의한 각국 통화, 금융정책에의 개입 역시 주권 분할의 중요한 사례였다. 배타적 국민국가, 배타적 주권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국민국가, 주권의 분할가능성과 비배타성은 그것이 한 민족의 내재적 역사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민족, 국가, 민족주의는 초국가, 초민족, 세계경제의 질서와 동시에 발생한 현상이었다. 영국, 프랑스 등 근대 국민국가의 모델을 제외한다면, 그 이후의 모든 민족 형성, 국가 형성은 이러한 선진 국민국가의 모델을 따른 것이며, 또 선행하는 국민국가로부터의 학습과 상호작용(갈등, 전쟁,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후발자본주의 지역 혹은 식민지 지역에서의 국가 형성과 민족주의의 움직임은 인근 국가 혹은 침략국에 대적하고 상대하기 위한 정치공동체의 필요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들로서는 국가라는 형태의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강요된 것이었다. 즉 국가와 민족주의 그 자체는 열국(inter-state) 질서의 산물이고 기든스가 말하는 성찰적 감독(reflexive monitoring)의 산물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법은 국내법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으며, 초국가질서는 국민국가의 형성과 역사를 같이한다. 민족주의는 주로 후발자본주의 국가의 현상이었지만,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세계주의는 특수와 보편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개별들간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의 추상일 따름이었다. 실재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이익이었으며, 보편주의·국제주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실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민족주의가 근대적인 현상이며,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단위를 염두에 둘 때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민족주의, 민족 형성의 시도 혹은 그 동전의 이면에 있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는 사회적 계급적 내용을 갖는 것이었다. 사회의 각 성원이 민족, 국가에 부여하는 의미는 자신의 계급적인 위치에 따라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피억압 지역의 민중이 민족주의를 견지한다는 것은 민족성원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초민족적 계급으로서 행동하는 이익보다 더욱 중요하고 가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민족, 국가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 한, 추상적인 국제주의에 경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데이비스(Davis)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의 사회주의 운동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반면 '국민으로서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국가 소속의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노동자들에게서 국가·계급 구성원으로서의 이중적 정체성, 대자본가·상층 귀족들의 국제주의적 경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유럽연합(EU)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유럽에서 국가, 민족에 대한 정체성의 약화현상은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국가 형성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존재해왔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세계질서, 국민국가의 약화현상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대 자본주의 발전 이후 계속되어온 경제와 정치의 불안정한 타협이 새로운 단계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 이후 동서 냉전체제의 수립, 미국과 유럽에서의 케인즈주의적인 복지국가의 완성, 노동계급의 체제내화는 시장 위기를 국가가 방어해내면서 국내의 자본축적 위기를 군사적 대립과 군비지출, 조합주의적 타협으로 해결하면서 국민국가의 틀을 더욱더 공고히 해온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일국에서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조화되기 어려운 불안정한 체제였다. 1980년대 이후 국가에 의한 시장의 제

한기능이 도전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생산방식의 혁신, 상품의 경량화, 정보통신과 운송수단의 발전, 자본·금융·정보의 유동성이 강화되면서 국가의 경제선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붕괴와 냉전질서의 붕괴는 자본주의 발전의 이러한 내재적인 추세를 더욱 가속화·전면화시킨 촉진제가 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민족의 비중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기치 않은 현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예견가능한 것이었다. 독일의 통일, 유럽과 구소련 지역의 민족주의의 발흥은 바로 냉전체제 해체과정의 힘의 공백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민족주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3. 한국근대사와 민족주의

앞에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형성 이후 어떤 국가와 민족도 이러한 질서와 무관하게 존립되지는 않았으며, 식민지 지역의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역시 '보편'의 구호를 내세운 서구의 침략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촉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개항 이후 한국의 모든 국가 형성 운동과 민족주의는 이러한 국제정치질서과 국제경제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계체제에 편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조선(Korea)은 "문화적 전통, 언어·혈연·정치적 공동운명에 비추어 세계사상에 희귀한 단일민족"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의 중앙집중적 통치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민족국가와 민족주의가 형성될 수 있는 풍부한 토양이 존재하였다. 개항 이후 100년 이상 동안 우리는 근대적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의 영향과 국내 정치세력의 분열로 민족국가 형성을 이루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 민족주의 혹은 민족국가 형성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한국 근현대사를 필자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단계는, 민족의 생존을 폭력적으로 억제한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민족국가의 형성을 시도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저항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반침략·반봉건의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단계는, 일제가 물러가고 통일된 국민국가의 형성이 가시화되었으나 미·소를 축으로 하는 냉전질서의 고착으로 남북한이 분단되어 '민족없는 국민국가(nation-state without 'nation')'가 수립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민족주의는 남북간 대립의 극복과 민족의 통일을 과제로 하고 있었다.

셋째 단계는, 통일된 민족국가가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분단을 강제하는 국제적인 조건이 사라지고, 민족의-통일이 민족 내부의 문제로 집약되는 1980년대 말 이후 현재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남한 내 계급분화와 자본의 국제화가 현저히 진척되어, 민족국가의 형성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되는 시기이다.

앞의 첫째 단계와 둘째, 셋째 단계간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일제를 물리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족국가를 새롭게 건설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면, 후자의 경우 민족국가가 아닌 분단국가가 수립됨으로써 민족국가의 형성이 분단국가 형성의 해소·약화라는 과제를 거쳐서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첫째, 둘째 단계와 셋째 단계를 가르는 구획은 분단국가인 남한에서 공업화와 사회분화가 진척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함으로써 민족국가의 형성=부르주아 주도의 전통적인 민족국가 모델이 설정되기 어렵게 된 점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민족국가의 형성은 한국의 역사적 과제이지만 동시에 동시대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한국 역사발전의 시간과 세계체제의 시간이 불일치함으로써, 한국은 전통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하기도 전에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는 시점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필자는 첫째 단계가 고착되는 한말·한일합방기와 둘째 단계가 고착되는 해방 8년간의 기간이 한국의 민족주의 및 민족국가 형성에서 ‘유형설정 시기’였다고 본다. ‘유형설정 시기’라는 것은 이후 역사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서,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규정력이 작용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세계체제 내에서 우리 내부의 역량과 대응의 폭이 비교적 넓었던 시기라는 의미이다. 그 중에서도 한말에서 일제식민지로 나아가는 과정은 특정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결정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후 100년간의 근대사를 들짱는 가장 중요한 유형설정기였다고 볼 수 있고, 해방 8년(1945~1953)의 기간은 민족 주체역량의 개입 폭이 이보다 훨씬 좁았다고 판단된다.

세계질서 속에서 약소국이 민족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은 곧 침략주의에 대한 저항과 내부의 근대적 개혁의 양면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의 건설은 대외적 독립의 문제이자 대내적인 시민·국민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국가의 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① 물리력을 기초로 침략세력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② 강대국의 힘의 균형과 힘의 공백을 활용하는 정치전략이 필요하며, 대내적 민족(국민)의 형성을 위해서는 ③ 반봉건 민주주의 개혁과 ④ 근대적 제도와 문화의 도입이 한꺼번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①, ③은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속에서 민족이 힘을 바탕으로 독립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전

환기나 해방 8년 시기의 전환기에 우리 민족은 대외적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과 대내적 민주개혁과 국민 형성을 추진하는 세력이 언제나 불일치하였다. 이것이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로 나타났다. 대체로 위정척사파에서 상해임시정부로 연결되는 반외세 민족주의를 굳게 견지했던 세력은 그들의 계급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웠고 복고적이었기 때문에 국내의 민족역량을 동원해낼 수 없었다. 국내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동학농민군이나 일제하의 사회주의 운동 역시 국제정치적 시야를 결여하고 있었으며, 민족역량의 동원에서도 한계를 갖고 있었다. 외교적 노선과 근대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개화파,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주관적인 독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정 강대국에 의존하는 결과로 나아갔고, 급기야는 제국주의 침략을 용인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

분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 민족주의가 실패한 것은 주관적인 민족의식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역량 동원의 실패(여가에는 지도세력 내의 통합 결여, 민중에 대한 적대시 등이 포함된다)와 가장 철저한 반외세 반봉건세력의 국제정치적 감각과 내부 정치역량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결국 남한에서의 분단국가는 위의 ②, ④ 세력—더이상 민족주의의 진영에 서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게 된—을 선두로 하여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민족주의의 견지와 민족이익의 확보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가 처한 국제정치적인 위상이나 국제정치적인 힘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가 한국인들의 민족보존의 의지를 넘어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족국가의 수립과 민족이익의 확보는 민족주의의 강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역량의 문제인 것이다.

4. 분단—'국가승배'와 민족주의의 억압

분단은 미·소를 양극으로 하는 세계정치체제의 한국적 실현형태이다. 남북한은 이러한 양 '제국'의 침병이었다. 분단국가의 수립은 곧 민족주의의 좌절을 의미한다. 그리고 냉전적 세계정치체제의 체현자로서 분단국가의 성립은 국가의 행동이 '민족의 이익'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냉전적 이데올로기, 즉 체제대결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분단국가는 '민족의 이익'보다는 '민족'의 대표자, 대표기구임을 자임하는 남북 양측의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러나 남북한이라는 국가간의 대결은 미국 대 소련 혹은 체제 성격을 달리하는 인접 국가간의 적대적 대결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왜냐

하면 한반도의 분단은 부분적으로는 일제식민지하에서의 민족운동 노선 대결의 연장선에 서 있으며, 따라서 양 분단국가는 스스로가 민족공동체의 정통 혹은 국제체제(UN)의 인정을 받는 민족국가임을 자임하고 있으며, 상대방을 ‘민족의 대표자’, 즉 민족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양 국가가 호전성과 적대성을 갖게 된 이유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매우 동질적인 민족이기 ‘때문’이다. 지난 분단사는 남북한이 상대방을 점차 국가로 인정해온 역사이지만, 여전히 상대방을 민족의 한 ‘배신적’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행동과 국가로 인정하는 행동이 교차하면서 상대방의 불신을 증폭시켜왔다.

남북한의 역사는 이들 모두 민족주의의 언술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주의’의 원칙하에 ‘민족주의’를 억제해온 역사였다. 북한은 구식민지시기에 견지되던 저항적 배제적 민족주의를 견지하였으나, 그것은 내부의 단결을 위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남한의 경우 박정희 집권 초기 ‘민족적 민주주의’의 논리가 표방된 적이 있으나 실제 외교정책이나 국내통치에서 민족주의는 오히려 억제되었다. 최상위의 지배논리는 국가질서의 유지이며, 국가질서의 유지에 반하는 민족주의 = 통일, 민족자주성은 부정된다. 남북한이 국가질서의 유지를 우선하면서도 민족주의를 중요시한 예외적인 사례는 1970년대의 남북회담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공통점은 남북한 최고 권력자 모두 미·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으며, 민족적 자존심의 훼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남북한간의 더욱 엄격한 국가주의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점은 바로 분단체제가 국가질서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에서 분단된 국가의 수립이 양 지역 거주민에게 심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국가는 단순히 국가의 기반이 불충분한 국가가 아니라 만(Mann)이 말하는 국가의 전체적 힘(despotic power)이 더욱 강한, 더욱 완벽한 정치단위이다. 이 경우 국가는 국가 내 성원을 통제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이었으며, 민족은 오로지 ‘상상의 공동체’였을 따름이었다. 국기, 애국가, 국화, 국민교육, 국민징병제, 예비군제도 등으로 표상되는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동원은 파시즘하의 독일과 일본 이상으로 더욱더 완벽하게 진행되었으며, 남한의 한민족은 남한 국민으로 더욱 철저하게 사회화되었다. 폴라니(Polanyi)가 주장한바 영국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독일에서의 파시즘으로 귀결되었다면, 프랑스의 자유·평등의 시민권이란 근대국가의 이념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가장 가공할 만한 국가승배로 남북한에 정착되었다. 한반도에서 ‘국가성’은 ‘민족성’에 우선하였으며, 남한 국민은 한민족으로서 북한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적국의 백성으로 대하였다. 남한 국민들은 북한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기뻐하고 미국 등 '자유진영'이 북한을 혼내주는 것을 기뻐하는 정서에 길들여졌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분단국가는 기본적으로 냉전적 세계체제의 산물이지만 냉전질서의 점진적 와해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1960년대 후반 이후 냉전적 세계정치질서의 와해, 세계질서의 다극화와 국익 중심주의로 발전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오히려 체제대결적 분단국가가 더욱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가로서 남북한 분단국가의 완성=민족분단의 고착화는 '제국주의' 세력의 의도 혹은 세계체제의 강요가 아니라 분단된 국가의 자기논리, 남한에서의 자본주의적 공업화와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이라는 내적인 발전논리에 기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간 경제력의 격차는 심대하게 역전되었다. 과거에는 북한이 '이념'으로서 '민족'의 대표자임을 주장하고 남한이 수세적인 입장에 있었으나, 이제는 남한이 '경제력'으로서 '민족'의 대표자임을 자부하고 있으며, 북한이 '민족'으로 자부하면서 남한을 통일시키려 들기는커녕 반쪽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하는 수세적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5. 탈냉전 질서 속에서의 한국의 민족주의

따라서 1980년대 말의 소련,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와해는 한반도에서 체제대결의 논리 대신에 민족주의의 논리를 부활시키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냉전질서의 붕괴는 남북한으로 하여금 '국가의 논리' 대신에 '민족의 논리'가 우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조성하였다. 미·소가 더 이상 민족주의의 억제력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면서 민족 형성은 남북한 당사자의 의지에 상당부분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 대한 전통적인 의존논리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던 중국, 러시아 등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경제의 글로벌화'의 진척과 세계 각 지역에서의 '지역경제통합' 경향의 강화는 시장논리가 아닌 이념에 의한 국가간의 적대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질서에 편승하기 위한 내적인 준비를 서두를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곧 대미의존적 외교노선의 탈피, 체제대결을 전제로 한 군사비 지출의 억제, 국가정체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교육내용의 개정, 각종 냉전적인 법률과 사회제도의 개혁, 민족의 통일을 예상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수행, 국토재구화 계획 구축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통일=민족국가 형성의 기반조성이라는 목표하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이러한 외적 조건은 남한 내의 내적 조건을 통해서만 현실화될 수 있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의 내적 조건은 앞 절에서 언급한 고착화된 분단국가의 존재 및 분단국 내에서의 사회분화와 계급·계층의 분화라고 할 수 있다.

근대사의 모든 과정이 보여주었듯이 '민족', '민족주의'는 그것을 구성하는 사회집단의 이해관계 및 정서와 깊이 결합되어 있다. 그린펠드(Greenfeld)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구성원에게 있어 민족이란 자신의 위신을 높여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단위가 된다. '민족'이 자신의 위신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될 경우 '민족'은 무의미하게 된다. 반대로 민족구성원으로 자신이 얻을 것이 많고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상징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분단된 국민국가가 그 성원들에게 충분한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제공해준다면, 국가를 버리면서 '민족'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자의 기반은 축소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민족 일반'을 강조하는 통일운동은 낭만적인 것으로 치부될 것이다. 즉 남한 국가 형성과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국민적 동질성의 강화 및 내부의 특권, 준특권계층의 성장은 남한 내에서 '민족'주의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약화시켰으며,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적 민족주의를 경제적 재생산과정에 기반을 두지 않는 학생과 지식인의 전유물로 만들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 교육수준의 향상, 공업화에 의한 농촌공동체의 해체, 도시화와 소비문화, 대중매체의 발전은 모두 정서적 민족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내부의 심각한 계급분화는, 민족적 공동운명체성은 물론 국가 내의 공동운명체성, 시민적 동질성도 회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대자본은 이제 자신을 길러준 국가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국민·국가·민족이 자신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중간층은 자신의 약간의 기득권을 전면적으로 재편할지도 모르는 '민족통일'보다는 '국가질서의 유지'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다. 노동자, 농민에게도 '민족'이 국제화된 경제질서 속에서 점점 불리해지는 자신의 입지를 구원해줄 전망을 갖지 않는 한 '추상적 공동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모두에게 이제는 '민족 일반'이 아닌 '어떤 민족국가' 인가가 실제로 중요하게 된다. 민족주의는 과거에는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을 공격하는 진보의 논리로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국제화'를 가로막는 보수적이고 퇴영적인 논리로 비판을 받게 된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모든 남한의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어서 통일이 곧 생활조건의 하락을 의미한다면, 민족주의=통일의 동력은 오로지 이들의 정서 속에 남아있는 관념적 요소에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수혜층이 증가하면서 대다수 남한 국민들은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자신의 생활의 하락을 수반하는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남한 정부가 '민족주의' 노선을 내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이 서독, 동독 국민들의 민족주의의 열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동독의 붕괴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당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통일, 민족국가의 형성이 바람직한가,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한가, 그렇게 시급하게 달성해야 하는가, 남한 국민들은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통일을 지지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냉전질서의 와해가 민족주의의 공간을 확대시키기는 하였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의 부재로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은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민족국가의 모델이 추구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현재의 세계질서는 한국의 민족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조건적인 상황과 내용을 규정하게 되고, 민족국가의 형식은 한국의 역사적 조건에 규정당한다. 즉 한국의 민족국가는 한국 역사발전의 요구에 의해 촉진될 수 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19세기 유럽의 민족국가나 1945년 후 신생독립국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일될 민족국가는 배타적 주권과 단일한 시장권을 가진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국제 경제질서에 깊이 편입되어 있고, 한국 내의 사회관계도 이제는 이러한 세계 경제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화·분권화 추세는 시민생활에 대한 중앙권력의 독점을 제한할 것이며, 민주주의는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지방 차원에서 주로 거론될 것이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남북한 국민들은 '민족'이라는 추상개념 속에서 쉽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 한국 민족주의의 진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세계시장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현재의 세계질서 속에서 방어적 폐쇄적 자국중심주의(ethno-centrism)는 설 자리가 없다. 김구의 민족주의 노선, 북한의 주체사상 노선은 한국인들에게 일종의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과거나 현재나 국제 정치·경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

치를 깊이 생각해보면, 성공하기 어려운 대안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최근의 '국제화' 논자들이 주장하는 한국인의 지나친 폐쇄성과 과도한 자국중심주의는 일면적 진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보여주는바 '강한 자존심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민족주의'는 외세로부터 수없이 많은 침략과 설움을 당하면서 민족적 자존심의 훼손을 뼈아프게 자각했던 우리 선각자들의 자화상이자, 그러한 사고의 잔재이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내적인 단결을 위해 필요할지는 몰라도 지나친 자국중심주의와 배타성을 가져올 수 있고, 내적으로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다. 단군릉 발굴에 대한 북한의 대대적인 선전작업은 북한 민족주의의 실질적인 정치적인 의미와 기능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그러나 '국제화'와 민족주의 일반이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결여된 것은 정치적 민족주의=민족국가의 수립이며, 이러한 정치적 민족주의의 결여가 오히려 정서적인 자국중심주의, 민족적 폐쇄성을 조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념에 바탕을 둔 체제대립으로 모든 국민을 몰아감으로써 우리는 타민족, 타인종의 문제를 공감하면서 그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세계정세의 변화를 똑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또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던 것이다. 즉 '국제화'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자국중심주의는 사실상 민족의 분단과 민족주의의 결여라는 현실 속에서 강화된 것이다. 한말의 지식인들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과 서구에 대한 극도의 배타성만 가진 채 그들의 침략의도를 파악할 능력을 갖지 못한 것처럼,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과 북한에 대한 적대 속에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민족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전진적이고 개방적인 민족주의의 결여였다.

현재 한국의 국가목표로까지 승격되어 논의되는 '국제화'는 일제식민지로의 전략 전후의 문명개화론, 1960년대의 근대화론과 논리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문명개화론, 근대화론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민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임에 틀림없다. 과거의 문명개화론과 근대화론이 후진국가로서의 자기정체성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현재의 국제화론은 그보다는 더욱 더 진취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은 그동안 세계경제 내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화'론이 과거의 문명개화론·근대화론과 같은 공통점은 이들이 ① 서구 선진국의 표준을 추종하는 것이 곧 민족의 발전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② 보편주의적 정서에 경도되면서 실제로는 '특정의' 외세에 의존하는 결과로 나아가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③ 국내 민중에 대한 배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민중의 역량을 동원하기보다는 엘리트의

자각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 과거의 문명개화론·근대화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중적 에너지에 바탕을 둔 전진적 개방적 민족주의가 확고히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견지해야 할 국제화 노선, 곧 개방적이고 전진적인 민족주의 노선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면서 실질적으로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범세계화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적 기준과 표준에 맞추는 노력'은 탈냉전시대의 '국제적 표준'—그것은 곧 한반도에서의 국가주의 극복과 민족주의 강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민족 우선의 노선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추구, 국내의 냉전적 사회관계의 청산, 대미의존 외교노선의 탈피와 주변 4대 강국과의 적극적이고 실리적인 균형외교의 추구로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또다른 국제적 표준은 내부의 개혁과 민주화이다. 만약 내부의 민주화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의 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할 경우, '복지 없는 시장주의'를 더욱 강화시켜 내부의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심화시킬 것이고, 통일의 성취는 물론, 선진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 구축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의 개혁과 민주주의적 훈련이 결여될 경우, 한국의 기업가들은 동료 국민과 다른 민족의 삶과 삶의 공간, 환경의 문제를 무시한 채 무한대의 이윤추구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반복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신을 추락시키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훈련을 받지 못한 한국의 졸부들과 중간층은 지금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난한 자에 대한 무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들은 북한사람들을 이등민족으로 취급하거나 무시하여 결국 내부의 갈등과 적대를 증폭시킴으로써 통일의 비용을 높일 것이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하는 '국제화' 노선이 만약 일정한 성공을 거둔다면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토대 구축에 상당히 기여하겠지만, 정치적 민족주의와 내부의 민주화, 사회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민족국가 형성에서 지불되어야 할 비용은 오히려 기업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다. 구한말과 해방정국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이 깊이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국제화' 추진세력이 한말 개화파나 분단국가 주도세력과 마찬가지로 국가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노선과 실천 경력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화'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